



즉시 배포용: 2022년 7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대법원의 무분별한 결정에 대응하여 총기법을 강화하고 무기 은닉 소지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랜드마크 법안에 서명

법안(S.51001/A.41001)에 따라 민감한 장소에서 무기 은닉 제한

소유주의 허가 없이 사유지 또는 민간 기업에서 무기 은닉 금지 설정

은닉 소지 허가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신설 및 조건 강화

안전 보관 요건 개선 및 차량까지 확대 적용

모든 화기 구매 시 신원확인 의무화

버펄로 총격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 방탄복을 포함해 방탄복 구매 규정 개정

법안에 서명하고 있는 Hochul 주지사의 사진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총기법을 강화하고 무기 은닉 소지를 제한하는 랜드마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의회와의 밀접한 협력으로 초안을 마련한 새로운 법안 패키지는 최근 대법원(Supreme Court) *NYSRPA v. Bruen* 판결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 주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여파인 뉴욕주 내 무기 구매 및 은닉 소지 증가, 면허 신청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대법원은 약 한 세기가량 지속되었던 우리 뉴욕주의 무기 은닉 소지 제한을 철폐하는 무분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파행적인 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NYSRPA vs. Bruen*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헌법 및 정책 전문가, 지지자, 의원들과의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 저는 우리의 총기법을 강화하고 무기 은닉 소지를 제한하는 랜드마크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신 **Stewart-Cousins** 상원 대표, **Heastie** 의장, 의회에서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기 폭력 사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최우선 과제이며 저는 오늘 주지사 및 의회가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뉴욕은 전국에 우리의 총기 규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대법원의 결정을 그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기가 사용된 폭력 범죄는 권총을 소지할 권리가 있을 때 [29 퍼센트 증가](#)하고, 이는 부분적으로 총기 강도 **35% 증가**, 경찰 개입 **13%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법안 패키지는 화기로 인한 부상 및 사망을 막고자 하는 주정부의 노력을 강화합니다.

- 신청자의 화기 훈련 과정 수수료 등 은닉 소지 허가 절차에서 자격 요건 확대.
- 주정부가 허가 신청인의 훈련 관리 및 기준 마련.
- 민감한 장소에서 무기 은닉 소지 제한을 비롯해, 화기, 라이플, 샷건을 사유지에서 소지 시 해당 사실 표명 규정 신설. 민감한 장소에서 무기를 은닉하여 소지하거나 사유지 소유주에게 해당 사실을 숨긴 사람 형법에 따라 처벌 적용.
- 범죄로 기소된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및 화기 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 신설.
- 주 전역의 화기 면허 및 화기 데이터베이스 운영.
- 버펄로 총격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자가 사용했던 종류 등 하드 방탄복을 포함한 방탄복 판매 및 화기 안전 보관 관련 법안 구체화 및 강화.

법은 **2022년 9월 1일**에 발효됩니다. 또한 면허 또는 갱신이 거부되거나 폐기된 사람을 위해 항소 위원회가 만들어지며, **2023년 4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오늘 법안 패키지에 서명하는 Hochul 주지사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총기가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여, 우리는 뉴욕주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총기 법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주정부는 방어의 최후 전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욕을 총기 은닉 허용이나 총기의 무분별한 취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이유입니다. 이전 통과된 총기 폭력 방지 법안과 함께, 이러한 조치는 미국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총기를 소유하게 된 지금 시점에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뉴욕은 계속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와 Heastie 의장, Hochul 주지사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이상 지속된 은닉 소지법을 뒤엎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하원 여당은 상원 및 주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정부가 가장 강력한 총기법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우리의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뉴욕에서 사람들은 공공 공간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총기 소지 권리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파 보수 법원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주, 대법원은 6-3 판결에서 100년 동안 지속된 법적 선례인 화기를 은닉하여 소지하는 사람이 '적절한 사유'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기존 법이 주정부와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사유'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후속 법안(S.51001/ A.41001) 마련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NYSRPA vs. Bruen* 판결의 범위 내에서 무기 은닉 소지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민감한 장소 및 사유지

일부 장소는 언제나 총기 휴대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다음 민감한 장소에서 은닉 소지를 처벌 가능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민감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항
- 술을 판매하는 바와 레스토랑
- 법원
- 보육 시설, 놀이터, 기타 어린이 밀집 장소
- 교육 기관
-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및 노숙자 쉼터 등 비상 쉼터
- 오락 시설
-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건물
- 의료 시설
- 예배당
- 도서관
- 투표소
- 시위 및 랠리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 타임 스퀘어(Times Square)

법에 따라 사유지 소유자가 허가하지 않는 한 사유지 내에서 무기 소지는 기본적으로 '소지 금지'로 판단합니다. 이로써 기업과 사유지 소유주는 바, 레스토랑, 상점, 식료품점 등 자신이 관리하는 곳에서 무기 소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닉 소지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사유지 소유주는 해당 사실을 게시하여 해당 부지 내에서 무기 은닉 소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무기 소지자가 있을 수도 있는 공간에 입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및 불허 조건 확대

법안은 무기 은닉 소지 허가 신청자에 대한 자격 조건을 확대합니다. 신청 요건의 확대에는 신원 보증, 화기 안전 훈련 과정, 대면 심사, 신원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폭력 행위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무기 은닉 소지 허가를 얻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불허 조건에는 무기 소지 및 위협 관련 경범죄, 최근 약물 관련 치료 기록, 술 관련 경범죄 기소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 보관

오늘의 법안은 또한 라이플, 샷건, 화기 등에 대한 새로운 안전 보관 요건을 신설합니다. 총기 소유주는 금고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를 차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주 법에 따라 만 16세 이하가 거주하는 집에 총기를 보관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안은 만 18세 이하가 거주할 경우, 안전 총기 보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화기 관련 신원조사

법안에 따라 범죄로 기소된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및 화기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가 가지게 됩니다. 주정부의 신원조사는 FBI의 전국 실시간 범죄 기록 확인 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보다 강력한 수준에서 운영됩니다. 기존 시스템은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기록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따라서 신청자의 신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정부가 연방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경우, [화기 자살율이 27 퍼센트 하락했고 화기 살인율이 22 퍼센트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또한 총기 판매의 경우 신원조사를 의무화하고 주 전역에서 면허 및 총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방탄복 규정 개정

현행법은 '방탄 조끼'를 총탄을 막을 수 있는 소프트 방탄복으로 제한하여 규정합니다. 이번 법안은 방탄 조끼의 범위를 총탄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보호 장비로 확대하여, 하드 방탄복을 포함한 장비에 대한 구매 및 판매 제한을 적용합니다. 버펄로 사건에서 가해자는 강철로 덧댄 방탄 조끼를 입었는데, 이러한 경우, 새로운 방탄복 규정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